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로지역, 재정안정 구제금융 방안 합의

□ 유로지역의 16개국 재무장관들은 재정안정 구제금융에 대한 기본사항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함.

- 유로지역 재정안정을 위한 구제금융기금의 전체 규모가 7,500억유로(1조1천3백억원)로 알려진 가운데 유로지역 16개국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7,500억유로 중 일부에 해당하는 4,400억유로(6천6백억원)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로 결정함.
- 특수목적법인에는 이사회가 구성되며, 이사회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의 구조조정 수용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함.
 - 동 법인의 설립은 5월 중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대두되고,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재정정책 공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, 기금 거수 방법과 사용방안에 대한 논란으로 지연되다가 최근 합의에 도달함.
 - 국가별 지원금액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할당하는 것이 향후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할당된 기금 거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 국가의 할당기금을 초과 거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됨.
 - 7,500억유로의 재정안정 구제금융기금 중 2,500억유로(3천8백억원)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IMF는 유로지역의 재정개혁과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유럽발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특수목적법인의 조기 설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짐.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수목적법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이전에 긴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600억유로(9백억원)를 마련한다고 밝힘.

□ 한편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구제금융기금 마련과 재정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일의 선제적인 재정긴축 및 세수확보 추진 계획이 발표됨.

- GDP대비 재정적자가 3%를 조금 넘는 독일은 2014년까지 800억유로(1천2백억원)의 예산을 절감 하겠다고 발표함.
- 군 구조조정을 통한 1만5천명의 공무원 감축, 공공건설 연기로 지출을 감소하는 한편 은행세, 항공세, 에너지산업 세금감면 폐지 등으로 세수를 증대한다고 밝힘.

(Financial Times 6/8, AP 6/7)